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와 한미공조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인식¹⁾

이 성 현(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중국연구센터장)

【 목 차 】

I. 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워싱턴의 전반적 인식 ...	2
가. 종전선언·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인식	2
나. 트럼프 vs. 정책전문가 집단	2
II. 한미공조와 한미동맹에 대한 워싱턴의 인식	4
III. 북한 비핵화 협상 및 방법론	5
가. 검증 주체와 방법론에 대한 논쟁	6
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회의 부정적 역할 가능성 ...	7
IV. 관찰 및 정책 제언	8

1) 본 보고서는 2018년 10월15일-20일 동안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조야 인사들과의 회의 및 면담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 핵심 요약 ■

-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요구를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key)로 보기보다는 북한의 '덫' (trap)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이것이 단지 '상징적인 선언' 그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고 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논리'를 약화시키는 바, 결국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해준다고 봄.
- 결국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significant)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그러한 때가 오기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임.
- 현 시점에서 트럼프정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워싱턴 정책커뮤니티의 입장은 '냉소주의'(cynicism)에 가까운 '비관론'(pessimism)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북한이 과연 비핵화로의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트럼프 행정부와 전문가집단 사이에 존재함.
-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비핵화 행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것들이 '의미심장한'(significant)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 2018년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 존재함.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평화'(peace)이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비핵화'(denuclearization)임.
- 미국과 한국이 각각 북한에 대해 취하는 정책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상대방이 정답을 추측하도록 하는 게임'(guessing game)식의 전술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케 만들고 있다고 함.
- 미국의회는 내년 초가 되면 주요 대선후보들이 표면에 떠오르기 시작할 것임. 우리정부는 이에 대비하고, '협상의 지속'을 강조하는 민주당 정치지도자들에 대해 이들을 돕는 공공외교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I. 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워싱턴의 전반적 인식

가. 종전선언 ·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인식

-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요구를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key)로 보기보다는 북한의 '덫' (trap)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그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1)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합법화하고 2)한미 동맹을 분열 시키며, 3) 심지어 북한 주도하의 통일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걱정, 4) 또한 북한의 향후 도발 시 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법적 제한' (legal bar)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봄.
- 종전선언과 관련, 미국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1)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해주고, 2) 북한의 국내 정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마침내 철회했다”고 선전에 이용하게 해주고, 3)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게 해주며, 4)과거에 미국을 속인 북한에게 우리가 또 다시 속는 것이라고 봄.
- 이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significant) 수준에 도달했을 때 종전선언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그러한 때가 오기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임.
-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보다 무슨 댓가를 치루더라도 '평화'를 우선시하지만 북한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고,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을 여전히 '기만'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 더불어,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엉뚱한 희망'을 부추기며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희생자는 한미동맹이 될 수 있다고 봄.
 - ※ 미국의 경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언제나 보다 폭 넓은 안보적 맥락을 가짐.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종전선언이후 주한미군 숫자의 감소 혹은 동맹 약화도 추진하려고 할 수 있다고 우려함.

나. 트럼프 vs. 정책전문가 집단

- 현 시점에서 트럼프정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워싱턴 정책커뮤니티의 입장은 '냉소주의'(cynicism)에 가까운 '비관론'(pessimism)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돌입하였다는 결정적 증거를 아직까지는 찾을 수 없다는 점, 북한과의 협상에서 과거에 실패한 경험, 그리고 트럼프란 인물에 대한 반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비공개회의에서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트럼프 접근법에 따라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과거 오바마정부 때의 소극적 접근법('전략적 인내')보다 나은 정책임을 강조함.
-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에 대해서는 (1) "그가 업무시간의 15%를 북한문제에 쓰고 있다"는 그 관료의 옹호 표현과 (2) 그가 '한국 데스크 담당 관리'(an official in charge of the Korea Desk)가 되었다는 외부의 표현에서 보자시피, 상호 대조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위의 표현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현재 미정부의 대북정책의 소유권(ownership)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북핵문제 해결에 큰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종료(2021년 1월) 전까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4차 방북을 앞둔 지난 10월 3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기자들에게 다시 확인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달성'이라는 명시적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는 거둬들였음.
 - ※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첫 임기 내 비핵화를 완료하고자 하는 내부적 목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북한이 과연 비핵화로의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트럼프 행정부와 전문가집단 사이에 존재함.
 -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결국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How Kim understands), 그리고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And what he told President Trump)라고 봄.

- 즉, 미 행정부의 역할은 김정은이 과연 핵 포기 전략적 선택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하기 보다는 이를 ‘테스트’하는 것이란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음.
-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비핵화 행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것들이 ‘의미심장한’(significant)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 북한이 의미심장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게 견인하려면 동맹들 사이에 북한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은 북한의 비핵화에 ‘배팅’하지 말아야 한다는 불신을 드러냄.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회의감이 형성되어 있음.
- 결국 미국은 북한이 포괄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핵물질, 핵물질 생산능력, 탄도미사일, 미사일 생산능력을 포기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미국이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 혜택을 승인하거나,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정치적인 양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임.
 - ※ 미국 일각에서는 군사적인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의제에서 제거되었고, 또한 동맹인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기도 함. 이런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미는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제시됨.

II. 한미공조와 한미동맹에 대한 워싱턴의 인식

- 한국의 ‘평화’(peace) vs. 미국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 한미 양국 사이에 2018년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 존재.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평화’이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있어 ‘비핵화’임.
-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래’에 발생할 일로써 그 과정이 이제 막 시작한 것으로 보는 반면, 한국 측은 북한 비핵화가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봄.
-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그 어떤 비용도 치르지 않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미국을 상대하는데 있어 한국이 북한을 “대표”(represent)하게 만들었다고 봄.
 - 북한은 북미대화를 “관계개선, 신뢰구축”의 장으로 보지만 비핵화는 아님.

종전선언 요구를 '첫 시작'으로 하여 북한은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논리를 제거하고 있음.

-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에 주저하는 이유 중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음.
 -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한국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발생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상호방호조약을 끝내게 하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이런 변화가 미국인들의 여론과 심지어 미국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 국민들이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주한미군을 '고향으로 돌아오게하라'고 요구하는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봄.
- 미국과 한국이 각각 북한에 대해 취하는 정책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 예) Peter Bookes, form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Now Isn't The Time To Go Soft on North Korea."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5, 2018.
-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없이는 한미가 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할 명분이 부족하며, 이를 간파하고 있는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는 '모양새'를 유지할 경우, 결국 한미가 향후 영구적으로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함.
 -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이 한미 공동방위태세 약화,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에 대해 우려함.

III. 북한 비핵화 협상 및 방법론²⁾

-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에서 북한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셀프(self)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만한 핵 신고를 하는 등 미국과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에 과감하게 부응하고, 일관성있게 비핵화의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임.
 -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상대방이 정답을 추측하도록 하는 게임'(guessing game)식의 전술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케 만들고 있다는 것임.

2) 이 부분에 있어 토의와 도움을 준 본 연구소 동료 우정엽 박사께 감사를 포함.

○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고 있고, 특히 보수와 진보의 의견은 비핵화 방법론의 현실적 가능성 부분에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음.

- 안보를 우선시하는 미국 내 보수 진영의 의견은 현재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유사하며, '핵신고 → 검증 → 해체'라는 정형화된 비핵화 방법론을 고수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법론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 정치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그에 반해, 미국 내 진보 진영에서는 협상 초기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다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군사적 옵션으로 회귀(回歸)할 것을 우려하여 보다 현실적 비핵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워싱턴 핵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핵신고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취하며 대안으로 '긴장완화 → 다수의 소규모 협상 → 완전한 비핵화'의 3단계 방법을 제시하는 인사들도 있음.

- 여기서 관건은 '소규모 협상'을 다수 개최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소규모 협상안을 만들어 북한과 계속하여 협상을 이어가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임. 협상이 중간에 깨지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강조함.

- 한편, 이 3단계 방법론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함.

○ 한편, '비핵화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미양국 간 더욱 협의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예컨대, '핵실험장 폐쇄'(shutting down a test site)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도 한미양국, 유관국 사이에, 그리고 북한과 소통을 할 때에도 서로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핵실험장 및 미사일 실험장 폐쇄에 대해서는 정해진 국제적 매뉴얼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필요함.

가. 검증 주체와 방법론에 대한 논쟁

○ 현재까지는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양국 사이에 어떠한 '검증'을 논의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북한이 핵신고를 하는 경우, 비핵화 검증의 주체가 미국이 될지, 아니면 IAEA가 될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의 역할론이 제기됨.
 - 특히,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에서 IAEA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포출되면서 이 부분에 보다 특화된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CTBTO의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미국 정부는 북핵 사찰과 관련, 이것이 '미국'이라는 개별국가의 행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IAEA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
- 향후 북한이 하게 될 핵신고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유관국 사이에 부재한 상태임.
 - 아직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정부가 생각하는 검증방법론이 전문가 그룹과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님.
- 향후 북한의 핵신고에 대해 검증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다면, 비핵화 검증 단계에서 IAEA의 역할에 대해서 한미가 공통의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어, IAEA 요원들이 북한에 들어가 어떤 장치·기계 설비를 사용할 것인지, 어디를 볼 수 있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한미양국 간 토의와 합의가 필요.
- 한편,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안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그것이 중요한 비핵화 결정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
 - 그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미국이 내놓을 조치가 북한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됨.

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회의 부정적 역할 가능성

- 이번 방미 시기가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행정부와 의회의 인식 차이를 강조함.

- 트럼프 미대통령과 미의회 사이에 입장이 다르고, 그동안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미의회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의회가 그의 대북정책을 '견제'할 가능성이 농후함.
 - 그럴 경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 미국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비핵화과정은 더욱 지연될 수 있음.
 - 실제로 미의회는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북명'이 될 수 있음.
 - 예컨대, 트럼프정부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답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해제해주려는 모습을 취하면, 어떤 한 의원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내놓을 수 있음.

IV. 관찰 및 정책 제언

- 미국측의 여전한 궁금증 : 북한이 대화에 나온 '진짜 이유'
 - 미국 워싱턴 조야의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가장 궁금해 했던 부분은 '김정은이 왜 대화모드로 나왔나,'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하겠는가'였음.
- 트럼프정부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특히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 최우선적인 우려를 해왔고, 또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의 중지(모라토리엄)를 가장 큰 큰 성과로 여기고 선전해온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정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근거 없는 우려라고 치부할 수 없음.
 -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트럼프정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민들에 대해서도 세울 필요가 있음.
- 2018년 봄까지만 해도 한미양국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에 대한 시각차를 덮으려는 모습을 애써 보였음.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측 참석자들이 한미양국 사이에 차이와 갈등이 존재함을 강조.
 - 이러한 '변화'가 향후 어떤 정책적 변화 함의를 갖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미국 정책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의견 교환이 필요함.

○ 한미양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 미국은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음.

- 예컨대, 한국이 '좋은 경찰'(good cop)(당근) 역할, 미국이 '나쁜 경찰'(bad cop)(채찍) 역할을 하는 식의 '역할분담'에 대해 미국 측은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측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하여, 대미 '트랙 1', '트랙 1.5' 혹은 '트랙 2'의 대화에서 위와 같은 식의 한미 역할분담론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며, 또 이점은 향후 대미 공공외교를 하는 데서 한국팀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할 것임.

○ 이번에 만난 미측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북한 및 핵문제 전문가 내지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인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사들이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나온 중요 발언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9월 5일 방북한 정의용 특사단장에게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 9월 6일 정의용 특사단장에 의해 공개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인사들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한 발언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는 전문가 개개인의 '북한 뉴스' 제대로 따라가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문제를 보도하는 미국 언론의 문제이기도 함.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음.

- 개선책으로서, 우리정부의 관련 부서가 '한반도 대전환'을 맞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학자들에게 이메일 '뉴스 레터'의 형식으로 업데이트 해줄 필요가 있음.

○ 한국 싱크탱크 기관들 사이에 미국 협상전략 이해 공유 필요

- 이번에 방문한 워싱턴 싱크탱크 중에는 일주일 전에 다른 한국 방미단이 찾아가 의견교환을 했던 기관이 있었음. 즉, 일주일 사이에 한국에서 온 인사들과 두 번 북한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진 것임.

- 앞서 지적했듯이 이들이 한국팀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미국측과 교류 과정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향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Korea Foundation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주체가 각 주요 기관의 방미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메시지 혼선을 줄이는 '교통정리' 역할을 해주는 것도 유용하리라 사료됨.

※ 한국의 대중 공공외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례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시 중국을 방문했던 한국 기관들이 각각 사드 배치여부, 사드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대한 설명을 달리 해줌으로써 중국측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던 역효과가 있었음.

- 미국 내에서도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정형화된 방법론('핵신고 → 검증 → 해체')에 대해 그 효과성을 의심하면서 대안('긴장완화 → 다수의 소규모 협상 → 완전한 비핵화')을 제시하고 있는 그룹이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대안제시 그룹들의 의견이 현재 미국 내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는 이들의 주장과 의견이 보다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론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 향후 내년 1월에 들어 개최될 것으로 생각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3월(3~4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Key Resolve & Foal Eagle)으로 이어지는 일정에 대비하여 우리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임.

- 위의 주요 일정들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앞길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하고, 내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혹은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도록 미리 평화정착과 비핵화의 전진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임.

※ 만약 미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상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성의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김정은은 비핵화 과정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비핵화는 관련국들이 협력하고 타협하려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꾸준히 가도록 견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 미국의회는 내년 초가 되면 주요 대선후보들이 표면에 떠오르기 시작할 것임.

- 이때 민주당 내 진보적 후보자들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거나 혹

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모든 것을 트럼프정부의 실패로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쟁을 피하고 군사적 옵션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북한과의 '협상의 지속'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정부는 이에 대비하고, '협상의 지속'을 강조하는 민주당 정치지도자들에 대해 이들을 돕는 공공외교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표현을 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음. 이를 위한 북미 대화는 중요함.

- 미국의 발언이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북한의 발언도 한국과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함.

○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내놓는 발언, 그것의 함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조건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함.

- 미국은 북한이 항상 합의내용에 함의를 깨도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고 의심함.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설득했던 이전의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웠고, 이런 실패는 더 큰 위기를 만들었음. 하지만 한미는 계속 이 문제를 다뤄야 함.

-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각자의 정치가 있고, 미국의 정치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의 파트너들과 어떻게 함께 일할지를 생각해야 함.